

정부 경고에도 치솟는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 초읽기

오늘 경제점검회의서 대응책 논의
석유 최고가 지정 실무 검토 착수
정유업체 '횡재세' 도입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급등에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열리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열린 2026년 준장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 유가 등 생활물가 불안정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유가 급등한 데 대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

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정유·주유 업계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의혹을 지목한 것은 '불공정한 폭리 추구 행위'를 차단해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는 국내 석유류 가격에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반

영됐는데, 이번엔 시차 없이 반영된 상황인 점을 엄중하게 본 셈이다. 국내에 비축된 유류는 이란 사태 이전에 구입했음에도, 가격을 바로 올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경고에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 오픈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으로, 전날보다 5.46원 올랐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1723원이었던 기름값이 5일 만에 172원이 오른 셈이다. 다만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과 '바가지 요금' 단속 검토 예고에 따라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된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르고 있는 유가를

감안하면, 정부가 실태 조사와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궁극적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담합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세운 바 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밀가루·설량 등 식료품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횡재세' 도입 주장도 나온다. 석유사업법 18조엔 석유 가격 등락으로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관련 기업에 정부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유업체로부터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게 2023년 당시 현재의 여론을 중심으로 나온 주장이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당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해당 의제를 꺼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힘, '한국시리즈식 경선' 놓고 시끌

공관위, 청년 등 정치신인 발굴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 탈락 겨냥" 비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을 발표하고 있다. 이 중 현역·비현역 분리 경선, 이른바 '한국시리즈'식 경선에는 특정 인물을 노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아닌 후보들끼리 예비 경선을 치른 뒤, 최종 경선에 오른 후보가 현역 단체장과 1대1로 맞붙는 방식의 경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야구 KBO리그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서 착안한 방식으로, TV 예능프로그램인 '복면가왕'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경선을 통해 1명의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현역 단체장과 결선을 치르는 것이다.

당 공관위는 청년과 여성 등 정치 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관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 발굴을 위한 시도라는 입장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현역은 기본적으로 당 조직과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어 신인들이 현역을 넘겨 어렵다"며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자 신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인물이 현역과 '1대 1'로 겨루는 것은 현역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정현 위원장은 현역 광역단체장들에게 단수공천을 기대하지 말라며 '물갈이 공천'을 예고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과 신인이 1대 1로 붙으면 현역이 손쉽게 이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역은 '1대 다(多)' 구도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과 신인의 여론조사·당원 투표 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인이 청년·여성 가산점을 받는다면 현역이 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당원 지형이 극단화됐다고 가정하면, 현역 단체장 중 일부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특정 인물을 탈락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계엄 사과와 '절운'(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운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룰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서예진 기자

정청래 "6·3 지선 승리 선봉장될 것"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 하지 않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가 지상과제"라면서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역 올한 컷오프·부적격자 공천·낙하산 공천·부정부패 공천'이 없는 '4무(無) 공천'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4강(強) 공천'도 내세웠다.

정 대표는 전반적인 지방선거 공천에 관해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 아마 제 지역으로는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일 것"이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최적의 후보를 배출하고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인천시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지사·경남지사 후보는 단수공천을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목표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나.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1인 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 공천, 계파 정치도 해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리당원보다 대의원의 투표에 더 비중을 뒀던 것을 폐지한 것을 '1인 1표제'라고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에 본격적으로 꺼내든 의제이며, 정청래 대표가 관철시켰다.

정 대표는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며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 통합에 대해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예진 기자

신동욱·나경원,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윤희숙·이상규 공천 신청
오세훈 "당 선거방침 재검토하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이 8일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의 수도권 선거 방침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을 지역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지금은 나아가기보

다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원의원도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정신으로 헌신할 각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를 하루 더라도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호소했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현상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차감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